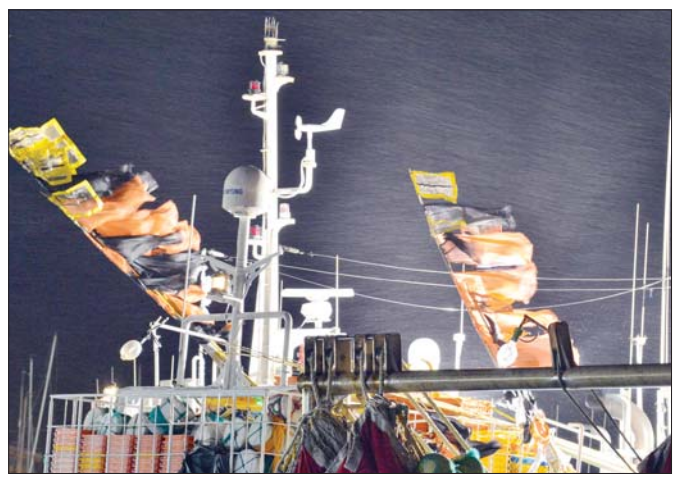
역대급 태풍 '링링', 철저한 예방으로 피해 줄였다

전라남도, 우려보다 피해 적어
서해 순간최대풍속 초속 50m
광주·전남 휩쓴 태풍 강도 4위
신속한 대처, 피해 최소화 요인


7일 오전 목포시 항동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 선박들이 피항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빠져나간 다음 날인 8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배 과수원에 강풍으로 떨어진 배가 나뒹굴고 있다. /뉴시스

강도가 센 중형급 태풍 '링링'이 광주·전남 지역을 강타했으나, 당초 우려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으로는 태풍의 진로·속도 변화 등과 함께 철저한 사전 대비가 꼽히고 있다.

8일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강도가 센 중형급 태풍 '링링'은 지난 7일 오전 전남 목포 서쪽 150㎞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태풍과 근접했던 서해 도서 지역에는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5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피해가 집중됐다. 신안 흑산도의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54.4m, 광주·전남 지역을 강타한 태풍의 바람 강도 중 역대 4위를 기록했다.

지역에 영향을 미친 태풍 중 최근 10년 사이 가장 피해가 컸던 태풍 '볼라벤'(2012년 8월)보다 위력이 컸다.

실제 '링링'이 몰고온 강풍으로 농작물 쓰러짐·낙과·정전·양식장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남도는 당초 우려와 달리 최악의 피해를 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태풍센터는 '링링'이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 등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세력이 강해진 채 북상했지만, 평년 수준의 수온을 유지한 한반도 서해상에서 중심 기압·강풍 반경 등이 약화됐다고 봤다.

또 한반도 접근 당시 고도에 따른 풍속 차이가 커지면서 태풍의 상·하층이 일부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태풍 진로도 당초 예상보다 서쪽(중국방면)으로 치우쳐지면서 상대적으로 내륙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북태평양 고기압 안에 있던 지향류(저·고기압과 전선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층 기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태풍이 한반도 서해 진입 이후 속도가 빨라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은 비 피해가 크지 않았다. 당초 기상청의 예상강수량보다 100㎜ 이상 적은 비가 내렸다.

행정당국이 신속한 대처에 나선 점도 피해 최소화의 요인으로 꼽힌다. 전남도는 태풍 접근 예상시점보다 사흘 앞선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태풍 대비에 나섰다. 도는 현장상황관리관(4급)을 22개 전 시·군에 각각 1명씩 파견했다.

현장상황관리관 중심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태풍 피해 예방대책이 추진됐다. 태풍 진로·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지역을 선별, 시설물 보완과 주민 대피를 유도했다.

위험 지역에는 태풍 접근 직전인 6일 오후 10시까지 대피 안내 방송이 진행됐다. 마을 이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 또는 홀몸 노인들을 직접 챙겼다.

이에 따라 신안 가거도 주민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풍랑주의보 발령에 앞서 여객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몸을 피했다. 노후 주택 거주 주민들은 마을회관·경로당으로 거처를 옮겨 피해를 입지 않았다.

과수 농가와 양식 어가에는 조기 수확·출하를 독려했다. 진도·완도 등지의 양식장에는 강풍 피해에 대비해 수산시설물을 강하게 고정하는 보강작업도 진행됐다. 어선도 해경 주도로 태풍 접근 사흘전부터 피항했다.

벼 쓰러짐 피해 예방 차원에서 농민들에게는 논에 물을 빼도록 권유했다. 현수막·폭염 대비 그늘막 등 각종 시설물도 모두 철거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태풍의 위력과 진로 등이 '볼라벤'과 유사하다는 평가에 비해 피해규모가 최악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정확한 재산피해 집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명피해는 없어 다행이다.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광주 서남동, 인쇄소공인 특화지구 된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선정
80년 역사·310개 인쇄소 밀집

광주시는 310여 개의 인쇄소가 밀집돼 있는 동구 서남동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소공인(10명 미만 종사자 수를 보유한 제조업체) 수가 50인 이상인 곳에 대해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서남동은 1940년대 전남도청이 있던 때부터 인쇄업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 80여 년 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 등 산업환경의 변화와 종이 인쇄산업의 쇠퇴에 따라 지역 기업들도 침체가 가속화됐다. 광주시는 지역 인쇄출판 업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남동 인쇄집적지 거점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내년 말까지 국비 15억원과 시비 20억원 등 총 35억원으로 공용장비와 공동기반 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시장을 다각화하도록 마케팅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쇄집적지를 활성화하고 디자인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역의 인쇄문화를 전파·계승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특화사업 선정으로 집적지구 소공인은 마케팅 비용과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은 "경제, 문화적 활력을 되찾아 청년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차정준 기자 cc6311@

광주·전남 음주운전 측정거부 늘었다

음주측정 거부 이유는 시간 지체
전남, 사고대비 사망 비율 3.8%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측정거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대안정치연대·전남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2014년~2018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4년 8376건, 2015년 7386건, 2016년 6927건, 2017년 7264건, 지난해 546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측정거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07건, 78건, 97건, 114건, 132건이다.

전남은 2014년 1만397건, 2015년 1만283건, 2016년 1만512건, 2017년 8244건, 지난해 7660건이 적발됐다.

측정거부는 각각 205건, 197건, 174건, 239건, 255건인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측정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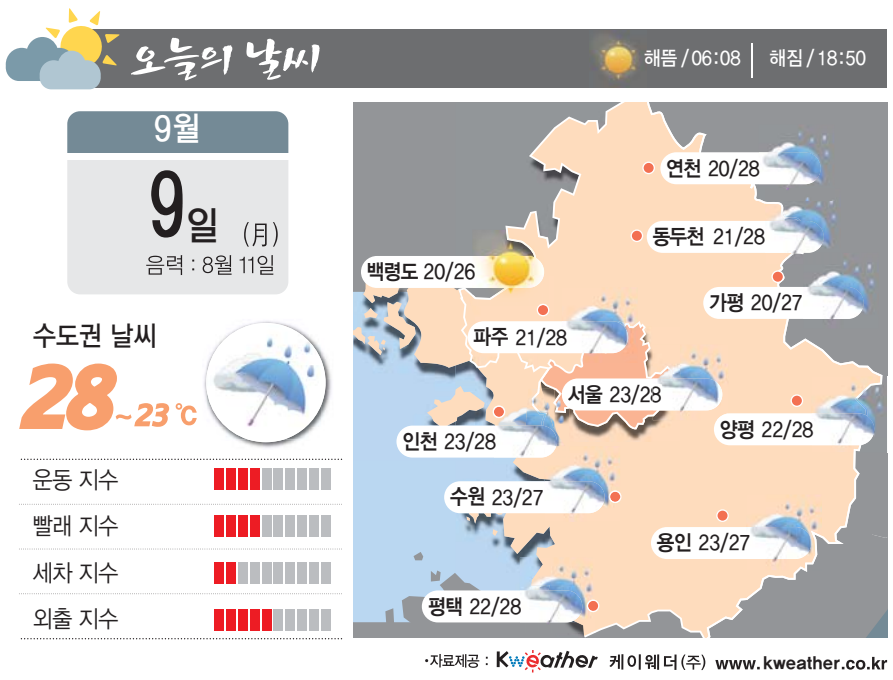
광주의 경우 5년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3878건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44명이 숨지고 743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남은 5097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96명이 숨지고 85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5일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전남은 사고대비 사망비율이 3.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5년동안 음주운전 적발은 109만건이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부상은 18만6000명, 사망자는 24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차정준 기자, 무안(전남)=양수녕 기자



담양군, 추경예산 436억원 확정

법정경비 우선 반영·민생분야 중점

담양군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342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36억 8000만원(11.2%)이 신장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4246억 9000만 원으로 433억 6000만 원(11.4%), 특별회계는 95억 3000만 원으로 3억 2000만 원(3.5%)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조정분과 시급하고 필수적인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 등 군민의 삶을 개선 할 수 있는 민생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담양군청.

/담양(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강화군

난정 10만 해바라기 정원축제

강화군 교동면 난정저수지 일원 약 3만3000㎡ 부지에 10만 송이의 해바라기 정원이 조성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난정 해바라기 정원축제를 열고, 추석 연휴인 13일과 14일에는 노래자랑 및 작은 음악회, 각종 체험행사 등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난정 해바라기 정원은 100여 명의 난정리 마을주민이 공동체 강화와 주민주도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공유수면에 조성한 것이며, 인근 난정저수지, 수정산과 어우러진 해바라기들이 장관을 이루면서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인천=박종규 기자 jkparks@